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40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5월 15일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정재정_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2.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3.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4. 원폭 돔
5.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6. 맺음말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정재정_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2023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고향이자 선거구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결의는 대단하다.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를 당한 히로시마를 세계에 보여주며, 핵무기 철폐와 전쟁 종식 그리고 영구 평화를 주창할 태세다. 이를 통해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주려는 의도이다. 자민당 파벌정치에서 기반이 약한 기시다 총리로서는 자기 위상도 높일 수 있는 ‘핑 먹고 알 먹는 꽃놀이패’가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다.

보통 때 같으면 한국 언론과 국민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뜨악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데다, 의장국인 일본이 초청했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5월 7일 서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 언론과 국민도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무시할 수 없고 히로시마에 있는 여러 평화기념 시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히로시마 평화기념 시설의 현황과 내력, 논점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일 정상의 ‘위령비’ 동반 참배에 숨은 의미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 등을 역사 화해라는 관점에서 전망해 보겠다.

2.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이하 공원)은 히로시마시 나카노구 나카지마에 있으며, 면적은 122,100㎡이다. 공원이 있는 자리는 에도 시대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히로시마시의 중심 변화가였으며,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군이 투하한 원자폭탄이 공원 위에서 폭발해 폐허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49년 8월 6일 히로시마평화기념도시건설법을 공포하고, 1950년부터 원폭 폭발 중심지 주변을 항구평화의 상징 장소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1955년 8월 완성해 1956년 4월 1일부터 사용을 개시했다. 공원 안에는 원폭 돔,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등 각종 기념물이 있다.

히로시마시는 매년 피폭 일시에 맞춰 공원에서 총리가 참석하는 거국적인 추도 행사를 거행한다. 이때 히로시마 시장은 평화선언을 발표한다. 1947년 평화선언에서는 “이날 아침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에 의해 우리 히로시마시는 한순간에 궤멸당하여, 수십만 동포는 고귀한 생명을 잃고, 히로시마는 암흑의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평화기념 시설이 들어선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항구평화를 상징하는 도시공원으로 정비된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단념시켜 불행한 전쟁을 종결시키는 요인이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쟁의 공포와 죄악을 말살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는 구절은 없었다.

2016년 평화선언에서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청명한 파란 하늘을 찢고 이전에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절대 악’이 히로시마에 투하되어 한순간에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동남아시아 사람들, 미군 포로 등도 포함하여, 아이들에서부터 노인까지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하여 그해 말까지 14만 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말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유일한 전쟁 피폭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일본이 끝까지 전쟁을 고집해 원자폭탄을 맞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다.

평화선언과 총리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특히 히로시마의 공식적인 원폭·평화 이야기는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히로시마가 일본이 아시아, 특히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군사 기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군사 도시 히로시마의 역할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886년 1월 28일 히로시마에서 육군 제5사단이 창설되었다. 5사단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베리아전쟁, 3·1운동탄압, 만주사변, 중일전쟁, 동남아시아전쟁 등에 투입되었다.

1888년 8월 1일 해군병학교가 도쿄에서 히로시마로 이전했다.

1889년 7월 1일 히로시마에 해군진수부를 설치했다.

1894년 9월 15일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을 도발한 직후 설치한 대본영을 히로시마로 이전했다.

동시에 천황이 히로시마에 내려와 따리를 틀었다. 히로시마에 대본영을 설치한 이유 중 하나는 마침 철도가 히로시마까지 연장되어 도쿄,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에 주둔한 육군 각 사단이 열차를 타고 집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히로시마 남단 우지나 항구를 통해 각 사단이 조선이나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0월 5일 히로시마를 임전지경(臨戰地境)으로 선언하고 계엄령을 시행했다. 이때부터 군도(軍都) 히로시마, 군항(軍港) 우지나라는 호칭이 생겼다.

10월 15일 히로시마에서 제국의회가 열렸다.

1895년 4월 27일 대본영을 교토로 이전했다. 천황도 도쿄로 돌아갔다.

1895년 6월 20일 히로시마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1931~1945년 우지나항 군사시설이 신설·확충되었고, 해외 침략을 위한 파병의 거점 역할을 했다.

1945년 4월 히로시마에 제2군총사령부가 설치되었다.

3.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전면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 그 결과에 따른 패전과 사회 혼란 속에서 일본 민중은 기아·빈곤과 싸우며 살았다. 따라서 전쟁이라면 전사자 유족의 슬픔, 공습과 원폭의 피해,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의 고통 등을 먼저 떠올렸다. 이런 것들을 통해 일본인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의식했다. 특히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체험이 일본의 피해자 의식을 대표하고, 전쟁 기억의 중심을 이루었다.

미군 점령 초기에는 검열로 원폭 피해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1946년부터 개인 차원에 머물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 자료 수집과 조사가 본격화하고, 시민도 이에 높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공원 안에 자리 잡은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이하 자료관)은 1949년 9월 히로시마시 중앙공민관에 설치한 원폭참고자료진열실에서 지질학자 나가오카 쇼고가 수집한 기왓장 등 피폭 자료를 책상 위에 늘어놓고 전시한 데서 시작한다. 최초의 피폭 자료 상설전시였다.

미군 점령 말기부터 평화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히로시마시는 1951년 2월 평화기념진열관(현재 자료관 본관) 건설을 시작해 1955년 8월 24일 완공했다. 시민 유지가 결성한 원폭자료집성후원회(현재 원폭자료보존회) 등이 자료를 수집했다. 이때 개관한 것이 현재의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이다. 히로시마시가 만든 첫 공식 원폭 체험 전시였다. 이를 계기로 히로시마는 군사 도시에서 평화기념 도시로 변모했고, 자료관은 일본인이 비참한 피해를 입고 대단한 희생을 치렀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심벌로 등장했다.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자료관은 1955년 개관 이래 전시를 세 번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개관부터 30년은 오로지 일본인 피해 전시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하여 중학생 관람자가 아시아 침략의 거점이었던 히로시마의 가해 사실도 전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히로시마 시민 일부는 ‘평화의 돌레’라는 단체를 결성해 ‘침략자 코너’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히로시마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가와모토 요시타카(川本義隆) 관장은 ‘침략자는 도쿄에 있다. 자료관의 유일한 목적은 1945년 8월 6일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1991년 히라오카 다카시(平岡敬)가 히로시마 시장에 취임했다. 그는 경성중학과 경성제국대학 출신으로, 학도 동원으로 흥남의 조선질소주식회사 화학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히로시마에 거점을 둔 주고쿠신문(中國新聞) 기자일 때(1965) 일본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한국인 피폭자의 비참한 삶과 눈물겨운 투쟁을 자주 보도했다. 처음으로 일본 언론에서 한국인 피폭자 문제를 다루었다.

히라오카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2기 8년간 히로시마시 시장을 역임했다. 1991년 8월 6일 평화기념식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이 “큰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995년 8월 무라야마 담화보다 앞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사죄한 것이다.

히라오카 시장은 1995년 전후 50년 히로시마 ‘평화선언’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와 공통의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피해와 가해의 양면에서 전쟁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전쟁 희생자에의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는 과거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많은 사람에게 건디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피폭 체험과 오키나와 체험을 생각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보다 앞서 내놓은 진지하고 공정한 역사 인식이었다.

히라오카 시장 때 자료관은 1994년 6월 1일 평화기념자료관동관(東館, 이하 동관)을 신축해 전시·수장 기능을 충실히 했다. 주요 내용은 히로시마가 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군사 도시로서 기능한 내력이었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도 들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관은 피폭 전의 히로시마, 원폭 개발부터 투하까지, 핵 시대의 현상과 히로시마의 평화 노력을 전시한다. 전시 흐름은 ‘폐전까지의 히로시마→폐허가 된 히로시마→전쟁·원폭과 시민→핵 시대→평화에의 길’로 되어 있다.

동관 전시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난징대학살과 한국인·중국인 등 강제동원을 다룬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전시 초점은 어디까지나 피폭 피해의 실상을 전하는 데 맞춰 있다.

본관은 피폭자의 유품과 사진 등을 전시한다. 전시 흐름은 ‘1945년 8월 6일→유품은 말한다→열선에 의한 피해→폭풍에 의한 피해→고열·화재에 의한 피해→방사능에 의한 피해→원호·구호 활동’으로 되어 있다.

본관 전시에도 한국인의 강제동원과 피폭 희생을 기술한 사진판이 있다. 거기에는 당시 노동력 부족으로 한국에서 강제로 끌려와 군수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수만 명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기했다.

자료관은 세계 각국의 일반인뿐만 아니라 요인이 방문하는 명소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2016년 5월 27일 자료관을 찾았다.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하는 것과 함께 미일의 우호·화해를 상징하는 이벤트였다. 이때 아베 총리는 방명록에 “원폭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에게 애도의 마음을 바칩니다. 항구평화를 기원하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가는 말하지 않았다.

아베 정권 아래 역사수정주의가 득세하자 자료관은 2017년과 2019년에 전시 내용을 크게 바꿨다. 피폭자 시점에서 원폭의 비참함을 전한다는 방침에 따라 피해자의 유품과 사진 등을 대폭 늘렸다. 반면 히로시마가 피폭에 이르는 과정, 곧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관련된 내용은 대폭 줄였다. 1955년 개관 이래 3번째이자 최대 규모의 개편이었다.

피폭자를 통해 피해의 실상을 전하는 본관 ‘혼의 부르짖음’ 코너 마지막에 야심 차게 새로 구성해 전시하는 부분이 있다. 처음으로 외국인 피폭자를 소개하는 ‘고향을 떠난 땅에서’이다. 일신했다고 화제를 모은 설명문은 다음과 같다.

“원폭은 국적과 민족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습격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사람을 비롯해 타이완과 중국 대륙에서 온 사람, 일본계 미국인 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징병과 징용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외에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유학생, 독일인 신부, 러시아인 가족, 포로가 된 미군 병사 등도 희생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 피해자를 우연히 히로시마에 살게 된 극소수 서양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히로시마에서 피폭한 10명 중 1명이 한국인이었다. 그들 중 3분의 1가량은 징용·징병자였다. 다른 외국인과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피해 규모도 너무나 컸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이 봤을 때는 공감할 수 없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자료관의 전시는 히로시마의 피해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가해를 보여주는 공간은 축소되고 설명은 애매해졌다. 이렇게 해서는 세계 각국, 특히 한국·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일본이 주창하는 핵무기 철폐와 전쟁 종식 그리고 항구평화 요구도 공허하게 들린다. 가해에 대한 반성이 철저해야 피해에 대한 공감을 획득할 수 있다.

4. 원폭 돔

원폭 돔의 지정 범위는 0.39헥타르다. 1915년 히로시마현의 물산품 전시·판매 시설로 세워져(히로시마 현물산진열관) 미술전람회와 박람회가 열렸고, 1933년 히로시마현산업장려관(이하 장려관)으로 이름을 바꿨



핵무기의 참상을 상징하는 원폭 돔

다. 3층 건물로, 일부 철골을 바탕으로 벽돌, 석재, 몰타 등으로 만들어졌고, 중앙에 동판의 타원형 돔을 얹었다. 히로시마 중심부가 대부분 2층 목조 건물이었던 것에 비해 유럽풍의 대담한 자태로 히로시마 명소의 하나였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원자폭탄이 장려관 동남쪽 160m, 고도 600m에서 작렬했다. 폭풍 압력은 1㎡당 35t, 풍속은 440m이었다. 건물은

열선과 폭풍을 맞아 대파하고, 천장에서부터 불이 나 전소했다. 폭풍이 수직으로 불어 본관 중심부는 파괴를 피했다. 관내 사람은 모두 즉사했다.

패전 후 장려관 잔해는 정상의 둥근 철골 모양을 본떠 원폭 돔(이하 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966년 7월 히로시마시의회는 돔의 보존을 결의했다. 그 후 국내외 모금 등으로 4회에 걸쳐 대규모 보존 공사를 실시했다.

1995년 6월 시민의 광범한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 정부는 돔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했다. 1996년 12월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돔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현재는 핵병기의 폐절과 항구 평화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심벌로서 기능한다. 건물에 입장할 수는 없다.

유네스코는 돔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건축물의 미학적 기준이 아닌 핵무기의 참상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심사 과정에서 미국 대표단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은 히로시마의 비극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며, “194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적절한 역사적 맥락 속에 놓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대표단은 “일본의 전쟁·가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될 것이 우려된다.”라며 등재 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돔이 갖는 세계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이다. 히로시마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폭발 직후의 모습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초래한 참상을 보여주는 냉혹하면서도 강력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그렇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왜 돔에 원폭이 떨어졌는지, 누가 원폭을 투하했는지는 기술하지

않았다. 곧 원폭 투하의 역사적 경위, 가해의 주체를 빼고 인류가 초래한 위험만을 드러내 돔을 해석한다.

돔의 기억도 자료관 등과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초점이 맞춰 있다. 돔이 세계 보편의 문화유산이 되려면 원자폭탄을 맞은 시각에서 벗어나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누가, 왜 돔 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지, 역사적 맥락을 분명히 기술해야 인류 모두에게 가치 있는, 살아 있는 세계유산이 될 것이다.

5.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이하 위령비)는 1970년 4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히로시마 본부의 주도 아래 히로시마현 일대 재일 동포의 뜻과 돈을 모아 건립되었다. 간략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본 패전 당시 히로시마에는 강제동원 노동자를 포함하여 약 14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5만 명이 원폭 피해를 당했고, 그중 3만 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2만 명 가운데 귀국자는 1만 5천 명, 잔류자는 5천 명 정도였다.

고국에 돌아온 원폭 피해 생존자는 1967년 원폭 피해자협회를 결성해 일본 정부에 치료와 보상을 계속 요구했다. 이들은 끈질기게 소송 운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히로시마 거주 한국인은 히로시마한국인희생자위령비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결성하고 건립을 추진했다. 히로시마 시장도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위원회는 공원 안에 건립하고 싶었지만, 히로시마시는 공원 안에 이미 여러 위령비와 기념비가 있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실은 한국인만 특별 대우할 수 없다는 게 본심이었다. 위원회는 모금을 통해 250만 엔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해 1970년 4월 10일 공원 밖에 위령비를 설립했다. 대한제국 황족 이우가 피폭 사망한 장소 근처라고 전한다.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은 위령비의 공원 안 이전 운동을 해, 1998년 12월 히로시마시의 승인을 받았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다. 1999년 5월 21일 공원 안에서 공사에 착수해 7월 21일에 준공했다. 검은색 대리석 비석 앞면에는 한국식 한자로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국회의장 이효상 글씨)를 새기고 비석 뒷면에는 한글로 위령비의 유래를 적었다(국어학자 한갑수 지음). 위령비는 높이 5m, 무게 10톤으로 전형적인 한국식 비석이다. 거북 모양을 한 받침대 위에 석주를 세우고, 그 위에는 쌍용 모양을 새긴 석관을 올렸다. 한국에서 제작해 히로시마로 운반했다.

1970년부터 매년 8월 5일 위령비 앞에서 위령제를 연다. 한국인 피폭 희생자를 추도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이 위령비를 오랫동안 일본이 홀대하고 한국이 무시했다. 5월 19~21일 사이에 예정된 한일 정상 동반 참배는 위령비의 역사에 새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벌써 재일 한국인들이 감개무량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일 정상의 동반 참배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원한을 씻어주고 역사 화해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방치되었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치료와 보상을 받기 위한 운동과 성과, 양국 정부의 조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운동

1960년대 후반 일본 정부에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1957년 피폭자 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나, 일본 외 거주자는 배제시켰다.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결성했다.

1971년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장 박귀훈)로 개칭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구하는 진정·소송·시위를 전개했다.

1972~1978년 손진두 재판(피폭자건강수첩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사건). 손진두는 피폭 치료를 위해 1970년 일본에 밀항하다 잡혀 출입국관리령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딱한 사정을 안 일본 시민들은 손진두를 도와 소송을 제기했고, 1978년 마침내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했다(수첩재판). 손진두 재판을 계기로 재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도 건강수첩을 받아 독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2~2011년 일본 외 거주 피폭자의 수당 지급, 의료 지원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16건 제기되었다.

양국 정부의 지원 조치

1957년 일본 정부가 일본인 피폭자에 대해서만 ‘원자폭탄피폭자의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68년에는 ‘원자폭탄피폭자의 원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보호와 지원을 했다.

- 일본인 피폭자 35만 명은 복지 혜택 제공, 정밀 검사와 치료 및 생활 지원을 누렸으며, 1994년에는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해 포괄적 국가 보상을 실시했다.
- 1967년 11월 한국 정부가 원폭 피해자 시위에 관심을 표명했다.
- 1972년 10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1973년 2월 양국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치료센터 건립을 논의했다.
- 1978년 3월 손진두 재판이 승소로 끝나자 한국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서 한국인 피폭 피해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피폭자를 구제할 법적, 도의적, 인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부각되었다.
- 1979년 일본 정부가 재한 한국인 피폭자의 도일 치료를 허용하고 지원했다.
- 1988~1989년 일본 정부가 대한적십자사에 의료비를 기탁했다.
- 1991~1993년 대한적십자사에 복지기금을 출연해 이를 바탕으로 1996년 합천에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건립했다.
- 2005년 재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국내에서 일본에 원호 수당 및 장례비 신청이 가능해졌다.
- 2008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도 건강수첩 발급이 가능해졌다.
- 2015년 8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6년부터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재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한국에서 받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2016년 5월 한국 국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6. 맺음말 - 한일 정상의 위령비 동반 참배의 함의

기시다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른바 셔틀외교의 복원이었다. 한국 언론과 국민은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기시다 총리가 어떤 사과·반성 발언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리하여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인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겠다는 발표에 놀랐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가 동반 참배를 먼저 제안했다는 뒷얘기가 흘러나오자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일부에서는 역사 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꼼수라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한일 사이의 역사 문제를 오래 지켜봐 온 필자는 이번 동반 참배에 깊은 뜻이 숨어 있고,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역사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기시다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에서 강

제동원 문제를 염두에 두고,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라는 심정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굳혔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 의견을 피력하겠다.

첫째, 일본이 홀대하고 한국이 무시한 ‘위령비’를 존중함으로써 재일 한국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이하 민단) 히로시마 본부는 일본에서 차별받다 억울하게 원폭을 맞고 숨진 동포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70년 4월 공원 밖에 위령비를 건립했다. 일본의 원호를 받지 못해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폭자도 뜻과 돈을 모았다. 역대 한국 대통령은 아무도 눈물 어린 위령비를 참배하지 않았다. 동반 참배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재일 한국인의 울분을 씻어주는 행사가 될 수 있다.

둘째, 일본 특히 히로시마에서 벌어지는 피해 의식의 확산과 가해 의식의 축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번 동반 참배는 한국인의 피해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위령비를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히로시마 시민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가해 의식에 눈뜨는 자극제로 기능할 수도 있다. 물론 기시다 총리가 이 점까지 염두에 두고 동반 참배를 제안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히로시마 시민과 일본인이 피해 의식을 누르고 가해 의식을 높이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야말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역사 대화를 진전시켜 역사 화해를 이룩하는 데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 총리의 사죄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독일 브란트 총리가 1970년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과 차원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동반 참배는 역사 문제라면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일본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은 틀림없다.

한국 언론과 국민은 이번 동반 참배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과 용기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히로시마 시민을 비롯해 일본인은 역사 인식에 대해 한국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공유하는 여유를 갖게 된다. 그 바탕 위에서 이번과 같은 동반 참배를 앞으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등으로 이어 가면, 한일은 마침내 역사 화해의 길로 성큼 나가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그 물꼬를 튼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정재정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일제 침략과 한국철도》, 《일제의 조선 교통망 지배》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보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